

K-뷰티, 피부 속까지 관리… 항노화 기술 줄줄이 성공

**LG생건 고기능성 신제품 선배
아모레퍼시픽 역노화 기술 집중
애경산업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

국내 주요 뷰티 기업들이 피부 겉과 속을 모두 관리하는 데 이어 피부 건강에 중점을 둔 ‘스킨 통제비티(피부 장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 뷰티·건강 기업’이라는 새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7일 ‘화장품의 날’을 맞아 그간 축적해 온 연구개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화장품의 날 기념식에서는 LG생활건강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강내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화장품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유공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은 피부 장수 핵심 성분 ‘NADPower24’ 등을 개발해 왔다. 세포 노화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조효소로 알려진 NAD+의 작용 메커



LG생활건강 연구원들이 화장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LG생활건강

니즘을 규명하고, 피부 투과력 등을 개선했다.

나이가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한 효능에도 중점을 뒀다. 손상된 진피 섬유아세포에 해당 성분을 투여할 경우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등 세포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소기관들이 30분 만에 복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LG생활건강은 고기능성 신제품을 지속 선보이이고

있다.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 후’의 경우, 최근 항노화 미백 제품군 ‘3세대 천기단’, ‘비첩 NAD 파워 앰플’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천기단은 아시아인 6만 명의 유전자 연구 성과를 집약한 것이 특징으로 한국, 중국 등에서 동시 출시되기도 했다.

강내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LG생활건강은 1947년 럭키크림 출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화장품 산업 생태계

를 조성하고 글로벌화를 선도해온 K뷰티 대표 기업”이라며 “최신 R&D 트렌드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에 매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계속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생활건강은 매년 16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80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6%다. 앞서 2024년에는 1604억원, 2025년에는 157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썼다. 연구개발비율은 2024년 3.4%, 2025년 3.7% 등으로 유지했다.

피부 과학 경쟁은 뷰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약 672억원이다. 매출액 대비 2.91%를 투입했다. 같은 기간, 애경산업 역시 매출액의 3.28%인 115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쓰며 전년 2.62% 대비 투자 비중을 늘렸다.

아모레퍼시픽은 ‘홀리스틱 통제비티 솔루션’으로 피부를 넘어 전 생애 건강과 아

름다움을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역노화 연구개발은 피부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다룬다. 세포 성장과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PDK1을 억제하는 기전을 규명해 주름, 탄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에 중점을 둔다.

애경산업은 오는 2028년까지 화장품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글로벌 산학 협력을 통해 기초 연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애경산업은 최근 동성제약, 중국 푸단대학교 장강연구원과 ‘피부과학·뷰티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종별 피부·두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AI 기반 분석 플랫폼, 신규 원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신생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제품력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며 “실제 임상 결과나 독자적 기술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지지부진’

“사업성 떨어져” vs “골목상권 약화”… 입장차 여전

(대형마트업계)

(소상공인·자영업계)

정부 중재안에도 이해관계자 간 이견 전문가들 “기존 규제 실효성 따져봐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논의가 이해관계자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새벽배송 허용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이미 이커머스가 선점한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면서 상생자금과 판매 제한까지 떠안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단체 내부에서도 전면 반대와 조건부 수용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어 점포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한 새벽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부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새벽배송 허용 여부는 물론 상생협력금 규모와 판매 품목 제한 등 세부 조건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골목상권이 가진 근거리·즉시 구매 수요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잠식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인데,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꼼수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며 “대형마트 의무



지난 3월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 현장.

/뉴스시스

휴업일 규제를 풀고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의 마지막 경쟁력인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마저 대기업에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장도 “우리 동네마트와 슈퍼, 정육점, 반찬가게 등은 서민물가를 지켜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내놓은 상생안 역시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10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금 조성 1만원 이하 신선식품 소량 판매 제한 등을 제시한 상태다.

소상공인 진영에서도 대응 방향을 놓고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단체가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소비자가 새벽배송을 포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국비 지원 등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놨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되는 셈이다.

대형마트 업계 역시 정부의 중재안과

소상공인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대형마트에 대규모 상생비용과 판매 제한까지 부과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벽배송에 나서려면 물류 시스템과 배송망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상생자금 조성 10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금 조성 1만원 이하 신선식품 소량 판매 제한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벽배송에 나서려면 물류 시스템과 배송망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상생자금 조성 10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금 조성 1만원 이하 신선식품 소량 판매 제한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경쟁 구도만을 전제로 한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층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층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이미 규제 없이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업체와 대형마트 간 경쟁 구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심리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새벽배송 소비자와 실제 골목상권의 소비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소비자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오히려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7.19% 유지… “민생안정 의견 모아”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의 배경으로, 지출 효율화 및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관측 등을 들었다.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700억 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000억 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내년도 추가 보험료 수입은 3조8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영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 지원이 증액된 점,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



이영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명했다.

또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여져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09%로 동결된 뒤 2026년도분

이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 이 차관은 국고 지원을 미준수 지적에 대해 “한꺼번에 국고 지원을 증액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정부, 전세 공급 늘릴 정책적 보완 필요”

» 1면 ‘치솟는 임대료…’서 계속

김모씨(25)도 최근 이사를 고민하다 대학 시절부터 살던 집을 재계약하기로 했다. 김씨는 “전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새로운 집을 알아볼 시간과 여유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대출 제약으로 새로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전세 매물도 줄어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

다”며 “청년의 경우 목돈을 주거비로 묶어 두기보다 주식 등 다른 투자처에 활용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전세 공급을 늘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중심의 정책과 실거주 의무, 임대차 3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임대인의 시장 진입과 전세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채리 기자 cr56@